

LG정유, 해고보다 명예퇴직이 어때?

파업노조원에 사직권고 구설 ... 시민단체는 인권탄압 빌미 불매운동

LG칼텍스정유가 해고예정 방침을 통보했던 노조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LG정유는 12월20일 “7월 대규모 파업사태에 연루됐던 노조원 650여명에 대해 12월23일 징계방침을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1월 △해고 50여명 △정직(15일-3개월) 300여명 △감급(감봉) 280여명 등 징계 예정 방침을 통보한 뒤 2차례 재심을 거쳤다.

해고대상 통보자 중에는 김정곤(42·구속) 노조위원장 등 구속자 8명과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재심과정에서 징계 대상자들의 반성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때문에 노조는 최근 회사 정문 앞에 <불법 파업해서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12월9일 대의원 수련대회에서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등 회사로부터 징계 최소화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다.

LG정유의 한 노동자는 “솔직히 동료 노동자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씩씩한 심정으로 회사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가 일부 해고 예정자들에게 자발적인 명예퇴직 등 사직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부당 노동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고 예정자 중 재심을 통해서도 구체되기 힘든 직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팀장과 면담하면서 해고와 명예퇴직 중 어느 쪽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정유 인권탄압 범시민대책위원회 여수산업단지 진입로 4거리에서 <LG정유 인권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LG정유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LG정유는 33억여원의 손배 가압류와 각종 고소·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범대위가 12월11일부터 시작한 LG정유 불매운동에 여수·순천·광양에 이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화학저널 2004/12/22>